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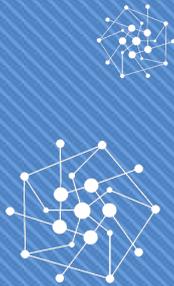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 정지의 의미

서성철 HK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지난 2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남미공동시장 4개 회원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12월 1일까지 회원국들이 요구한 민주주의 정착, 교역 조건 마련, 인권 상황 개선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성철 HK연구교수와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 정지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Q1.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려 달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역내 시장을 통합하고 역외 시장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창립된 남미공동시장(또는 남미경제공동체)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냉전 시기가 끝난 후 유럽의 경제공동체였던 EEC의 성립에 자극받아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1960년), 중미공동시장(CACTM, 1961년)이 설립되었으나 참여국 간의 경제적 마찰, 관세인하에 대한 적절한 방법의 모색 실패 및 통합 방법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 노정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안데스 지역 5개국은 LAFTA를 탈퇴해 1969년 안데스공동시장(ANCOM)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중남미통합연합(LAIA)이 결성되었고, 이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별도로 양국 간 경제통합프로그램(ABEIP)을 마련해,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정책 실패 및 외채의 누증 등으로 경제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브라질의 콜로르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양국은 1994년까지 공동시장을 만드는 데 합의하였고, 양국과 의존 관계에 있는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이에 참여하여 1991년 3월 26일 아순시온 협약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이 설립되고,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1994년 12월 17일에 조인이 이루어졌고, 1995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오루프레투(Ouro Preto) 협약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이 창설되었다.

관세동맹으로 출발한 남미공동시장은 남미 국가들의 물류와 인력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 및 움직임을 촉진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2016년 볼리비아도 가입했지만, 투표권은 없는 상태), 준회원국 7개국(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그리고 옵서버로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다.

Q2.

남미공동시장은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왔나?
또한 남미공동시장이 출범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그동안 남미공동시장은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시켰고, 대외공통관세(CET)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통신 등의 분야에서 거시경제정책상의 협력을 이루어냈고, 통합과정을 원활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련 분야의 법 제도를 일치시켰다. 한편, 외부 시장에 대한 동일한 관세체제를 만들었고, 1999년부터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조치나 활동으로 1990년대 남미공동시장의 통합에 큰 진전이 이루어져 역내교역은 관세동맹 출범 후 1990년대 후반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하나의 예로서 1990년~1998년간 총수출은 75% 증가하였으며, 이중 역외 수출은 44%, 역내 수출은 393%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FDI 및 회원국 간 투자 증가는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급증해 통합 이전에는 연간 20억 달러(약 2조 3,888억 원)에 불과하던 FDI가 1999년에는 529억 달러(약 63조 원), 2014년에는 8,550억 달러(약 1,021조 원)로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에는 회원국 내 경제위기로 남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통합에 회의가 일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정부 등 좌파 성향의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남미공동시장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교역도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신정부는 대외정책으로 남미공동시장의 공고화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관세동맹 장벽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통합 확대와 심화정책이 병행 추진되었다. 2005년 6월에는 역내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기금 설립에 합의했고, 2005년 제29차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 남미통합 전략위원회 및 남미공동시장의 공동의회 창설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역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추진되었는데 2008년 제35차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과 약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협정(PTA)을 승인하였고 2009년 제38차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는 2004년 이후 중단되어 온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2010년도에 재개하는데 합의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제 정치 및 사회 분야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2010년 말비나스(포클랜드) 섬에서의 영국군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 공동성명도 그 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 협상을 금지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나 검토 중인 대외무역 협상 체결을 보면 상기 언급한 남미공동시장과 EU 간 FTA 협상, 고착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이래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의 협상, 2006년 협상 완료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인도, 남아공 3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검토 중에 있다.

Q3.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1991년 아순시온 협약의 체결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 중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및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역내 교역량은 감소하였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역내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남미공동시장은 인구 2억 9,000만 명(남미 총인구의 70%를 점함), GDP 3조 3천억 달러(남미 총생산량의 83%)를 상회하고 있고, 8,490억 달러의 교역(수출 4,410억 달러, 수입 4,080억 달러, 2014년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남미공동시장 총 교역액 대비 역내국 간의 교역액 및 수출 비중은 확대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점 외에 부정적인 점도 있다. 남미공동 시장은 사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대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와 같은 소국들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여 이로 인한 ‘비대칭성’ 및 ‘불균형 요소’가 역내 통합과 조화의 걸림돌로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측은 역내 통합 심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asymmetries) 문제를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전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과 역외국가와의 양자 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한 결속력 완화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Q4.

베네수엘라의 경우 남미 공동시장에 뒤늦게 정회원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 당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키토에서 개최된 15차 안데스공동체(CAN)에서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 안데스공동체를 탈퇴하였다. 그는 안데스 지역의 통합을 목적으로 맺어진 1969년의 안데스협약(Pacto Andina)이나 카르타헤나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들었고 안데스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강요된 세계화 전략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볼리바르 운동의 출현 이래 그가 취해온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OAS)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주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계획을 반대하면서 남미공동시장에 가입을 표명하게 된다. 이런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베네수엘라는 2006년 남미공동시장의 회원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 입장에서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 부국인 동시에 상당한 소비·투자 능력을 갖춘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좌파정부,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던 브라질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지지하였다. 다만 파라과이만이 2005년부터 추진된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정회원 가입을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으나 2012년 루고 대통령을 탄핵하면서은 좌파 성향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파라과이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고, 대신 베네수엘라가 파라과이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베네수엘라가 정식으로 가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GDP 3,370억 달러(약 402조 원), 인구 3,040만 명을 가진 남미 대륙 5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남미공동시장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였다. 또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남미공동시장은 그 지역적 범위가 남미 파타고니아에서 카리브 해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Q5.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기 전부터 베네수엘라와 다른 회원국 간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소개해 달라.

작금의 베네수엘라와 여타 회원국 간의 불화는 차베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역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미 경쟁하던 상태였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석유 외교’로 역내 리더로서 부상을 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남미공동시장 기존의 맹주였던 브라질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의 경제통합보다는 남미 천연가스관 건설 등 자원을 바탕으로 한 ‘반미벨트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가 2012년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은 좌파정부 일색이었다.

그러나 파라과이(2013년), 아르헨티나(2015년)에서 우파가 집권하고, 탄핵정국을 거친 브라질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2016년) 남미공동시장 내에서 베네수엘라를 축출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16년 9월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올해 말까지 회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역시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우루과이의 중도좌파 바스케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으나 자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베네수엘라 축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2016년 12월 1일까지 날짜를 못 박고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 정지하겠다고 최후통첩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야기되었다.

Q6.

베네수엘라가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베네수엘라 내부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2013년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인 오라시오 카르테스가 당선되고,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리고 2016년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테메르가 대통령이 되는 등 앞서 언급했듯이 남미공동시장의 주요 회원국 정부가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좌파정부의 남미공동시장 내에서 입지는 좁아졌다.

실제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베네수엘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근본에는 정치적 동기가 다분히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역내 통합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로 선회하였고 남미공동시장과 EU 간의 불균형적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정책에 부응한 시장 친화적 성격의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우루과이에 이어 올해 연말 자동적으로 의장 수입국을 맡게 될 베네수엘라라는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참고로 2017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나 임시로 의장국 역할을 대행하게 됨).

이런 점에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베네수엘라의 축출에만 매달린 일방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의 의장국 지위를 비합법적으로 빼앗은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Q7.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 중지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알려 달라.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이번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해 별도로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여타 4개 회원국은 합의 하에 베네수엘라가 2016년 12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이 결의한 112개의 해결사항과 300여 개의 결정 등 약속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효력이 발휘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중지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2012년 남미공동시장 가입 당시에 4년 내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을 지금까지 불이행해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우루과이를 제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은 여러 기회에 걸쳐, 베네수엘라가 정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인권 등 국내 정치, 경제적 혼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순환 의장국 수임을 저지하였다. 제제 세하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남미공동시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엘라디오 로이사가 파라과이 외교 장관은 구체적으로 남미공동시장의 1991년 경제 상호보완조약(Treaty on Economic Complementation), 2002년 거주권협약(Agreement on Residency Right) 및 2005년 인권보호협약(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인권 보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공동관세 적용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하였다.

Q8.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았는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베네수엘라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첫 반응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3국 동맹'(triple alliance)의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남미공동시장의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쿠데타'로서 부당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는 금번의 자격 정지 조치를 우파 회원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제거 전략으로 간주하면서 남미공동시장에 나오는 규정과 법에 따라 관련국들에게 서신을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 조치로서 12월 5일 베네수엘라의 회원 지위와 관련한 이번 조치에 이의를 담은 요청서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본부를 둔 남미공동시장 ‘분쟁조정기구’에 보냈고, 조정 절차를 밟자고 천명하였다. 한편, 베네수엘라 회원 자격의 정지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남미공동시장의 설립 목적에 반한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전횡이자 사기”라고 비난하면서 12월 15일 미주기구(OAS)에 제소하였다.

향후 미주기구와 병행해 남미공동시장 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베네수엘라의 자격 정지에 대해서 논의될 것 같은데, 그 구성국의 성향을 미루어 볼 때 그 결과가 베네수엘라에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축출에 기권한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대통령은 양측의 대립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회원국의 정지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마두로 대통령에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남미공동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남미공동시장의 기준에 맞게 베네수엘라가 법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베네수엘라가 영구히 남미공동시장에서 추방되는 파국은 막을 수 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이제까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도 그리 크지는 않다.

Q9.

이번 베네수엘라의 자격 정지가 회원국 간 정치, 경제적 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통합을 목표로 지역 간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경제나 교역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근저에는 언제나 정치적, 전략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미공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체이지만 2012년 베네수엘라의 가입이 허용되면서 경제보다는 정치, 이념적 논리에 치우쳐 있었고, 이후 남미공동시장의 정치화가 가속화된 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 간의 역학 관계도 공동체의 통합 과정을 이행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협정(NAFTA)에서 미국의 역할에서 보듯 남미공동시장의 경우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전체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약 20%, 그리고 나머지를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각각 5% 정도를 점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통해 남미 통합을 꿈꿨던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힘의 역학관계를 재설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과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남미공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요국들이 우파 정부로 이루어지고, 베네수엘라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힘의 균형 축이 원 회원국들로 넘어간 것도 이미 보았다.

그러나 설사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축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을 지향하는 남미공동시장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에콰도르, 그리고 남미공동시장의 또 다른 회원국인 볼리비아(아직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음)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지지하고 나섰다.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에서 제외되면서 남미공동시장은 원래의 초기 상태로 회귀했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간 무역 분쟁의 가능성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잠복해 있다. 그리고 경제 규모에서 약자인 파라과이나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위주의 남미공동시장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남미공동시장 탈퇴를 전제로 한 미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도 언제든지 추진할 가능성도 장래에 배제할 수 없다. 회원국 간의 이런 비대칭적 구조나 차이가 향후의 남미공동시장의 통합 과정의 진척과 심화를 어렵게 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Q10.

베네수엘라가 회원국 자격을 잃은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번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 정지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는 남미공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으로 남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한 2012년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번 자격 정지로 베네수엘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당분간 남미공동시장의 무관세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과의 양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면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는 교역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에 의약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해 왔다. 그러나 남미공동시장에서 추방되어 베네수엘라 상품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수출은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동안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베네수엘라가 입은 적자 상황은 많이 해소될 것 같다.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한 이래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50억 달러(약 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런 무역 불균형은 가뜩이나 허약한 베네수엘라의 산업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한편,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면 우고 차베스 대통령 이래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통해 추구해 왔던 아메리카의 통합(Petroamérica) 염원도 좌절될 것이다. 사실 석유를 통한 아메리카 대륙의 통합은 이번 남미공동시장과 함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좌파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동맹’을 더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을 배제하고 에콰도르,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의 통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들 나라에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하는 것이 베네수엘라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